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2022. 2. 14.

관계부처 합동

☐ ☐ 목 차 ☐ ☐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3
II.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정책방향	6
1. 2021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6
2. 2022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8
III. 2022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10
1. 시행계획 개요	11
2. 분야별 주요 내용	13
3. 향후계획	36
[참고1]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37
[참고2] 법령 개정 필요사항 및 계획	39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및 270개 세부과제 마련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1년 최초 시행계획(308개과제)에 이어 제2차 ’22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2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련 32개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2022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우선 수립 후 지자체 시행계획 별도 수립(3월예정)

4

수립 경과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12.23)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1.3.23)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마련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안) 마련 및 제출(’21.12.20)

* 2021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온라인 설명(’21.11월)

○ 시행계획(안)에 대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 및 본위원회 민간위원 회람 및 검토

○ 부처협의 실시(청년정책 전담조직 협의회 개최, 1.19 등)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의결(’22.2.8)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2.2.14)

<참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방향 |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5대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 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 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② 청년건강 증진
-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 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②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③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Ⅱ.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정책방향

1 2021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본격적 청년정책 추진 원년으로서 국조실 중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이 정부정책으로 원활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 집중
 - 5년 중장기 계획과 연동된 첫 연차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계기별 종합대책+분야별 대책 통해 청년 정책 확장
 - 청년정책조정실 격상 및 부처 청년정책 전담조직 설치,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청년정책 추진 기반 공고화

1. 체계적 청년정책 본격 추진

- (법정계획) 향후 5년간 청년정책 비전·방향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른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첫 수립(‘21.3)
 - 32개 부처 및 쏠지자체 참여下, 308개 과제 23.8조원 투입(중앙정부)
- (종합대책)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여건 악화에 능동 대응하고 청년 세대 內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발표(‘21.8)
 - 일자리·주거 등 5대분야 87개 과제 마련, 총예산 17.8조원 투입
 - ① **일자리 분야**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 개선(80만명+a)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年960만원, 14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명) 확대 등
 - ② **주거 분야** : 24만명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주택 5.1만호 공급
 - 청년 월세 바우처(月20만원),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21→’23년) 확대 등
 - ③ **복지·문화 분야** : 35만명 자산형성 지원, 문화누리카드 31만명 지원
 -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1.5만명) 신설 등
 - ④ **교육 분야** : 56만명 등록금 부담 경감,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국가장학금 확대(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1,050명) 등
 - ⑤ **참여·권리 분야** : 정부위원회 20%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전달체계 연계 강화
- (분야별 대책) 청년 삶과 밀착된 분야 청년대책 시리즈 발표를 통해 촘촘하게 청년 삶 개선을 뒷받침하고 청년정책 범위 확대
 - 취약청년 지원, 청년생활 불편 개선과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까지 망라
 - * ▲ 직업계고 취업지원(‘21.7) ▲ 보호종료청년 지원강화(‘21.7) ▲ 청년생활체감(‘21.11) ▲ 인재 양성 정책 혁신방안(‘21.11) ▲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21.12) 등

2. 청년정책 추진 기반 확대·내실화

- (확대) 청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 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21.6)
 - 주요 부처* 청년정책 전담조직 설치('21.9), 청년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범부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기반 강화
 - * 9개부처 : (과단위) 기재·국토·금융·중기부 + (팀단위) 행안·복지·고용·문체·교육부
 -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정례화 통해 중앙-지방 소통 활성화
- (내실화)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下 실무위원회에 '전문위원회' 구성*('21.11)하여 전문성 제고
 -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야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정위·실무위 민간위원과 전문위 위원이 참여하는 '청조위 민간위원 연구모임' 설치*하여 정책지원 기능 강화
 -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창업 등 7개 분야
 - 他 정부위원회(경제사회노동委, 저출산고령사회委, 국가균형발전委 등)와의 공동세미나 및 협업을 통한 청년정책 논의 심화
 - 17개 지방 청조위와 연석회의 개최('21.4~6), 지역 의견 및 정책제언 수렴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위원회 참여) 청년들의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확대 추진중('21.8~)
 - 원활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인재DB'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21.8)
- (오프라인 활동 참여) 다수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
 - 청년의제 공론화장('21.10~11), 권역별 청년참여 거버넌스 워크숍 개최('21.11~12), 국조실장 주재 청년간담회(7회) 등 다양한 경로로 추진
- (청년의 날)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주간 교류회 등 다양한 행사 실시하여, 청년들과 직접 소통·홍보 노력('21.9)
 -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적극 활용,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 유도

2

2022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 ◇ 청년정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체감 여건은 여전히 어려움
 - 코로나19 극복 + 경제·사회구조 변화 가속화 대응 + 새로운 청년정책 수요에도 부응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
- ◇ 코로나19 대처와 함께 전환기 청년역량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충에 주력하고 증가하는 정책수요 대응에도 만전
- '22년 시행계획 통해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뒷받침

1. 코로나19 지속 및 사회경제 구조 변화 가속화

-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며 고용지표는 최근 개선 추세*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
 -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18.4 (8)14.3 (9)21.9 (10)18.0 (11)16.8 (12)26.6
청년 실업률(%): ('21.4)10.0 (5)9.3 (6)8.9 (7)7.2 (8)5.8 (9)5.4 (10)5.6 (11)5.5 (12)5.7
 - 기업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1년 이하 계약직·비정규직*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적·질적 어려움 상존
 - * 청년 비정규직 취업자 수(만명): ('18.8)112.4 ('19.8)136.2 ('20.8)128.3 ('21.8)141.4
 - 특히,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청년부채 증가 및 청년 세대 내 소득·자산격차 심화*
 - * △청년(20-30대)부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1년1분기) 13.3% → (21년2분기) 12.8%
△청년 하위 20% 대비 상위 20% 자산 비율은 '17년 31.75→'20년 35.2배로 확대
 -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구조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
 - 특히, 신산업 및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신규 분야 인력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인력양성 체계를 재편하고 역량 제고 지원이 긴급
 - 취업·일자리 위주 정책을 넘어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주거 부담 경감, 자산형성 기회 제공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 필요성 지속
- ⇒ 청년정책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제도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주거 안정, 자산형성 기회 확대 등 청년의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2.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

- 청년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정책 인지도·관심 및 참여 의사 증대
 - * 청년 문제해결 의사결정과정 참여 의향 : △의향있음 49.0% △중립 40.5%
 -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율 : ('20) 72.8% → ('21) 75.4% (청년정책만족도조사)
- 청년재직자, 학생,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예술인, 연구자 등 청년들의 삶의 분야 및 여건이 다양각색임에 따라 관심 정책도 다양해짐
- 동시에, 구직단념자,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과 코로나19로 심화된 청년 정신건강*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 * △(우울위험군) 20대 24.3%, 30대 22.6% vs 전체평균 18.1% △(자살생각률) 20대 17.5%, 30대 14.7% vs 전체평균 12.4%(21.7,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 청년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반영하기 위해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 기반 마련
-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요별·지역별로 세밀하고 개선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보완 지속

3.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중앙-지방-위원회 등 청년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보장됨에 따라, 범정부를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속도감 있는 이행 필요
 - 특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출범('21.6)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위상 및 역할 강화
 - 더불어, 관계부처 간 협업 시스템 강화로 빠짐없는 과제 발굴 및 적극적 이행 추진을 위한 공조 환경 조성

- ⇒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등 '정책수립-집행-점검-평가'의 정책과정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년정책 내실화 도모
-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 지속 추진 및 보완

Ⅲ. 2022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 및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308개 과제) 따른 과제 확대·구체화 + 청년특별대책 등 청년정책 집대성

⇒ 정책 사각지대 감소 + 분야별 청년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구분	'21년	'22년
과제(개)	308	376
예산(조원)	23.8	24.6

- '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분야	기본계획('21~'25)	'21년 시행계획(추경포함)	'22년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구직자 128만명+0 지원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구직자 101.8만명+0 지원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구직자 62.5만명+0 지원 ·민관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 40만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청년 8만명+0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주택 5.4만호 공급 ·청년 8만명 대출지원 + 월세 특별지원 15.2만명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혁신공유대학 8개 컨소시엄(46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서민·중산층 가구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94만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수립('22.上)
복지·문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등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참여·권리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등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확대('20 13.9→'21 17.1%) 등	·청년인재DB 구축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등

1

시행계획 개요

□ (총괄) 32개 중앙행정기관 총 376개 과제, 약 24.6조원 투입

□ (분야별) 과제수기준 일자리 분야, 예산기준 주거 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과제수	일자리 (39.3%)	교육 (28.5%)	복지·문화 (14.4%)	참여·권리 (10.6%)	주거 (7.2%)
예산	주거 (35.8%)	일자리 (31.4%)	교육 (27.4%)	복지·문화 (5.0%)	참여·권리 (0.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개) 및 청년예산(억원)

분 야	과제수	예 산		
		'21년 ¹⁾	'22년	(비중,%)
합 계	376	238,338	246,493	
I. 일자리	148	82,197	77,496	31.4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70	63,490	56,580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56	12,052	12,428	
3. 일터 안전망 강화	10	26	176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12	6,630	8,312	
II. 주 거	27	87,039	88,380	35.8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9	50,970	53,070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7	28,929	35,080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5	7,125	-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15	231	
III. 교 육	107	56,793	67,523	27.4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3	43,907	46,468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59	6,041	13,927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6,422	6,782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423	346	
IV. 복 지·문 화	54	11,623	12,219	5.0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7	752	3,616	
2. 청년 건강 증진	8	6,057	2,689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	360	813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5	4,454	5,100	
V. 참 여·권 리	40	685	874	0.4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9	11	9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3	12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9	160	139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18	511	714	

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추경 후)

□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수 및 예산

- (과제수) 과기부·문체부(42개), 고용부(41개), 국토부(39개), 교육부(38개) 順
- (예산) 국토부(8.7조), 고용부(6.0조), 교육부(5.5조), 과기부(0.9조), 문체부(0.8조) 順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수(개) 및 청년예산(억원)

기관명 ¹⁾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21년 ²⁾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12	0	24	1	5	4,734	8,646
문화체육관광부	42	9	0	5	27	1	9,041	8,334
고용노동부	41	34	0	5	0	2	61,100	59,801
국토교통부	39	6	22	8	1	2	84,825	87,170
교육부	38	2	2	30	1	3	50,291	54,989
중소벤처기업부	25	20	0	4	0	1	7,725	8,033
농림축산식품부	17	10	1	5	0	1	7,545	6,968
여성가족부	15	6	0	1	5	3	303	269
보건복지부	11	0	0	0	11	0	4,674	1,624
국무조정실	9	0	0	0	0	9	14	20
금융위원회	9	2	2	0	4	1	350	686
기획재정부	8	7	0	0	1	0	16	16
해양수산부	7	3	0	4	0	0	79	48
산업통상자원부	7	5	0	2	0	0	2,561	2,577
행정안전부	6	4	0	0	0	2	3,579	2,853
환경부	6	3	0	2	0	1	407	541
식품의약품안전처	6	0	0	6	0	0	19	26
특허청	6	3	0	3	0	0	81	83
농촌진흥청	6	3	0	2	0	1	46	94
산림청	5	3	0	2	0	0	80	66
국방부	4	1	0	1	2	0	371	2,947
인사혁신처	4	4	0	0	0	0	0	0
국가보훈처	4	2	0	0	0	2	78	97
병무청	4	2	0	1	1	0	26	29
문화재청	3	2	0	0	0	1	25	49
통일부	2	1	0	0	0	1	1	1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0	2	0	9
국민권익위원회	2	1	0	0	0	1	2	2
방송통신위원회	2	0	0	2	0	0	3	3
조달청	2	2	0	0	0	0	0	2
외교부	1	0	0	0	0	1	344	493
방위사업청	1	1	0	0	0	0	18	17
합계	376	148	27	107	54	40	238,338	246,493

1) 과제수 기준 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추경 후)

2

분야별 주요내용

1.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과 일할 권리 보장 강화

- ◇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취업역량 제고
- ◇ 공정한 고용시장 여건 및 안전한 일터 환경 보장을 통한 청년권익 보호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①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더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 확대, 특히 중소기업 취약청년 등에 집중 지원
-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 지원 및 고용·교육 훈련의 민·관협업 파트너십 고도화

* △^{시즌1}6개 대기업 17.9만개 일자리 △^{시즌2}2개 중견·플랫폼기업 2.3만개 일자리 약속

청년 구직자 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구직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small>고용부</small>	▶ 청년취업취약계층에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21) 총 23만명(+추경 5만명) - ('22) 25만명 ▶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 확대 ('21) 11개 - ('22) 50개 +a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small>고용부</small>	▶ (신규) 취업애로청년(6개월↑ 실업상태, 고졸이하 등)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인건비 지원 - ('22) 14만명 , 1인당 연 최대 960만원 지원 - 비수도권 배정 규모 확대, 지역기업 지원한도 상향 (수도권: 피보험자 50%, 비수도권 1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small>행안부</small>	▶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활력 제고 지원 - 지원인원 ('21) 2.6만명 → ('22) 2.6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small>기재부</small>	▶ 취업준비청년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 지원인원 ('22) 2.2만명 (1/4분기 중 0.42만명 채용)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small>산업부</small>	▶ 지역 우수기업 발굴 기업-청년간 취업 연계 지원 - 지원인원 ('21) 7천명 → ('22) 8천명
	해외 취업 지원 <small>고용부</small>	▶ 해외취업 희망 청년 대상 연수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지원인원 ('21) 4.4천명 → ('22) 5천명
구직단념 청년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small>행안부</small>	▶ (신규) 취업 관련 증빙서류의 신청, 발급, 제출(취업희망 기관)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24 사이트 개편
	청년 도전지원사업 <small>고용부</small>	▶ 지자체 청년센터 활용, 상담·교육 등 통해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의욕 고취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 지원인원 ('21) 5천명 → ('22) 7천명
	구직단념청년발굴 및 고용연계 <small>고용부</small>	▶ 국내 니트 청년 현황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한 한국형 니트 지표 개발

②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1,200만원 적립) **7만명**(’22년 신규) 지원, 기업 책임성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집중 지도 점검 고용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간 3,000만원 적립) **2만명**(’22년 신규) 지원, 가입자 무료 직무교육, 휴가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중기부
-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교통비**(월 5만원) **15.4만명** 지원 산업부

③ 신산업 분야 및 현장중심 취·창업역량 제고 지원

-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 교육·훈련 및 기업 주도 현장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신산업·그린 분야 일자리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분야	K-디지털 크레딧 <small>고용부</small>	▶ 혁신훈련기관을 통한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지원(50만원) - 지속 시행 (’22) 5.5만명
	K-디지털 트레이닝 <small>고용부</small>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 확대 시행 (’21) 17만명 → (’22) 2.8만명
	디지털 청년 동행 재단 설립 지원 <small>과기부</small>	▶ (신규) 선배 벤처 기업인으로 구성된 " 키다리 아저씨 재단 설립 "을 통한 청년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스타트업 허브 조성 <small>과기부</small>	▶ 국내외 스타트업간 기술협력 조인트 벤처 설립 지원 - 설립기업 확대 (’21) 11개 → (’22) 18개
	청년기업 디지털 서비스·자원 지원 <small>과기부</small>	▶ (신규) 청년기업 유망솔루션 적용 물류요금 경감: (’22) 1,000개 ▶ (신규) 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및 GPU 기반 컴퓨팅자원 지원 사업에 청년기업·연구자 대상 가점부여 및 매칭 부담완화
그린 분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small>중기부</small>	▶ 편리한 정주여건, 디지털 근무환경 조성 등 청년 벤처·창업가가 선호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가 조성 - (’22) 신규 2개소(대구, 원주) 설계용역 추진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small>환경부</small>	▶ 청년 환경 창업자 발굴, 정부통합공모 및 후속지원 - (’21) 25팀 → (’22) 25팀
	에코 스타트업 창업 지원 <small>환경부</small>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성장 지원 - (’21) 145개 → (’22) 145개
현장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small>고용부</small>	▶ (신규) 기업ESG 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 직무역량 및 일경험 기회 확대 - (’22) 170억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small>고용부</small>	▶ 산업별 협·단체 주도 기업 수요 반영한 훈련 실시, 산업·기업인력 미스매칭 해소 - (’22) 2,700명
	미래유망 분야 맞춤형 훈련 <small>고용부</small>	▶ 4차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채용예정자 대상 기업주도 훈련 실시 - (’22) 22개 기관, 195억 지원

②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 ① △청년친화적 창업제도개편 △신산업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연계
 △안정적 자금공급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청년기업가 성장 뒷받침

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아이디어 발굴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도전K-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한 창업아이템 보유한 예비창업자 경연 대회 - 10개 분야 예선리그, 최종 20팀 창업 지원 - 대학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창업팀 발굴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공공기관 보유기술을 개방·활용해 기술창업 활성화 - ('22) 선정 10팀(총상금 3.4억원) → 사업화 지원
교육 ·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아이템 및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지원 → 비수도권 민간주도형 학교 도입, 해외온라인 코칭 확대, 교육전담운영사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22) 지원규모 422억원, 인원 458명
	창업중심대학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역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 →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 부여 및 지원 - ('22) 6개 권역별 각 1개 대학 선정
	글로벌 창업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 기술교육과 창업기획자 네트워킹 패키지 지원 - ('22) 청년기업 30개, 규모 54억원 ▶ 해외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창업기업에 6개국 (미·독·영·중·러·베) 현지진출 액셀러레이팅 및 자금 지원 - ('22) 청년기업 37개, 규모 23억원
	팁스 TIPS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자·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 참여기업 확대 ('21) 80개사 → ('22) 100개사 - 운영사 범위 확대 ('21) 창업기획자 → ('22) VC기업형 -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 소부장 기업 발굴 확대 - 청년·전문특화형 운영사 선정: 7개 내외
	메이커 스페이스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 - 스페이스 구축 ('21) 213개소 → ('22) 233개소(+20)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자금 · 벤처투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small>중기부</small>	▶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 용자(1억원) 지원 - 지속지원 ('21) 2,100개사 → ('22) 2,100개사
	혁신창업펀드 <small>중기부</small>	▶ 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벤처투자 펀드 운영 규모 확대 - ('22) 1600억원 조성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small>금융위</small>	▶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 - 보증규모 확대 ('21) 1.48조원 → ('22) 1.7조원
	FRONT1 펀드 조성 <small>금융위</small>	▶ (신규) 청년창업기업 및 우수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 ('22) 420억원 조성
	청년기업 특화펀드 <small>과기부</small>	▶ (신규) 고성장 ICT 기업과 초기스타트업 투자 지원 - ('22) 400억원 지원
재창업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small>중기부</small>	▶ 실패경험과 우수아이템 보유 재창업자 발굴 → 특성별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 - 지원인력 확대 ('21) 72명 → ('22) 100명

②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

분야	주요사업	주요내용
농어업	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 <small>농식품·해수부</small>	▶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100만원, 최장3년), 등 지원 - ('21) 6.6천명(누적), 335억원 → ('22) 8.6천명(누적), 389억원 ▶ 영어정착자금(월 최대100만원, 최장 3년) 지원 - ('21) 683명(누적), 51억원 → ('22) 903명(누적), 68억원
소상공인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small>농식품부</small>	▶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장비, 전문교육 등 창업 전주기 지원 - ('21) 46팀, 5.4억원 → ('22) 50팀, 12.1억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small>농식품부</small>	▶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창업 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기회 제공 - ('21) 7개소, 9.8억원 → ('22) 9개소, 12.6억원
문화 콘텐츠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 <small>과기부</small>	▶ 창작자 콘텐츠 제작 및 창업지원 스튜디오 운영 확대 - ('21) 1개 (서울) → ('22) 4개 (서울 + 비수도권 3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small>문체부</small>	▶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 및 초기창업 지원 - ('21) 98팀, 25억원 → ('22) 133팀, 35.5억원

③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및 노동권의 보장

①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이행
 -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22.1월)^{고용부}
 -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 직종 선정 및 시행(22.7월)^{고용부}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수립 추진^{고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22.7월~)^{고용부}
 - 적용 대상(11.8만명: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등) 확대 및 특고 종사자 전속성(하나의 사업장 근로제공) 가입 요건 폐지
- 표준계약서 실태점검(22.5월~) 후 표준계약모델 마련^{고용부}

② 청년 노동권의 보장

- 노동환경 열악업종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감독(8,500개소)^{고용부}
-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전국10개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고용부}
 - 영세사업장 중심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고용부}
 - 사회적 이슈 사업장 조직문화진단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고용부}
- 근로자 경력단절 방지 및 보호
 - 임신·육아 등에 따른 재직자 복귀 및 경력유지 지원^{여가부}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50회)^{여가부}
- 장병 및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취업 지원
 - 청년 장병 진로도움 프로그램 및 청년장병 뉴스타트 운영^{국방부}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근거 마련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보훈처}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실태조사(~22.10) 후 제도개선^{교육부}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민간기업 공정채용 관행 확산

-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전면 개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고용부}
- 권역별 민간기업 소통채널 구축, 공정채용 우수사례 발굴·공유^{고용부}
- 중소기업 채용모델 컨설팅 지원, 민간기업(300개) 채용전형 설계^{고용부}

- 공공부문 채용절차 개선 및 비위 근절

- 정부합동 컨설팅단 운영,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평가 정착·확산^{기재부}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처벌·구제 등 후속이행 점검^{권익위}

- 공공부문 채용장벽 제거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19 또는 18세) 추진^{인사처}
- 지역인재 필기시험장 1개소(비수도권) 추가^{인사처}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21년 27% → '22년 30%)^{국토부}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청년 친화기업 선정·지원

-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1,214개소) → 선발기업 인센티브 제공^{고용부}
- '22년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확대 및 인증률 제고^{여가부}

- 일·가정 양립 지원

- 남성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3+3 육아휴직제* 시행^{고용부}

* 생후 12개월내 자녀, 부모 모두 휴직시 각각 3개월 (최대 : 만원) 1월 2백, 2월 2.5백, 3월 3백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50→80%, 최대 120→180만원)^{고용부}

-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사정책 청년자문위 시범 운영^{인사처}

II. 주거 분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

- ◇ 주거사다리를 통해 월세 → 전세 →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안정 지원
- ◇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

< 청년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분야별 체계도 >

분야	주요 지원정책	정책내용
1.취약계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별도거주 청년에게 추가 지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실비지원
	▶ 취약 주거지 개선	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확충, 대학가 부동산 허위매물 조사 등
2.청년주택	▶ 청년주택(전세형)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확보 후 청년에게는 저렴하게 재임대
	▶ 청년주택(매입형)	도심지 기존주택 매입 후 공급, 일자리·육아 테마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 추진
	▶ 청년주택(건설형)	직접 건설한 주택을 공급(행복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 임대사업자를 국가가 지원하되, 일정기간 청년주택으로 운영의무 부여
3.주택금융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7천만원 한도, 1.5~2.1% 전세대출
	▶ 중기청년 전세대출	1억원 한도, 1.2% 전세대출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 한도 대출(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예방에 필수적인 보증의 보증료 할인(10~50%)
4.내 집 마련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추가
	▶ 신혼희망타운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시설 등 제공
	▶ 공공자가 주택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 공급
	▶ 민영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신혼 등에게 특별공급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① 청년 임대주택 5.4만호 공급 및 분양주택 신규 공급 추진

-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지속('21년 목표 5.4만호와 동일) ^{국토부}

<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

청년주택 유형		사업개요	목표 공급 규모 (단위: 만호)	
			'21년	'22년
행복주택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60~80% 주택 공급	1.0	1.5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일부는 매입·전세임대로 공급	* 세부 유형별 공급 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매입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약50%이하 주택 공급	1.45	1.45
(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 세부 유형별 공급 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기숙사형	▶ 기존주택 등을 소규모 매입하여 대학에 임대 또는 기숙사 직접 운영		
전세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입주자부담 100~200만원	1.55	0.9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약85% 주택 공급	1.4	1.5

-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한 특화형 주택, 일자리·육아 등 서비스를 복합화한 테마형 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 확대 및 서비스 제고 ^{국토부}
-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 주택을 최초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등 품질개선 추진 ^{국토부}
-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 신규 도입 ^{국토부}
 - * 집값의 10~25%로 내 집 마련 후 나머지 집값은 20~30년간 나누어 부담(지분적립형)

②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

-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수용규모 0.6만명) ^{교육부}
-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금분할납부 비율('21년 23.8%→'22년 30.5%)과 카드납부 비율('21년 16.6%→'22년 22.5%) 확대 ^{교육부}

② 전월세 비용 경감

① 부모와 별도거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3.3만가구) ^{국토부}
- * 선정기준 확대(기준중위소득 45→46% 이하) 및 기준임대로 현실화(95→100%)하여 지급
- ** 신청 연령기준을 일(日)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22년부터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신청가능토록 연령기준 조정

②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 특별지원(15.2만명) ^{국토부}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중위 46% 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
지원내용	1인가구 기준 16.3~32.7만원 * 중위 30% 이상은 자부담 有	월 최대 20만원

- 8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23)을 통해 누적가입 59.8만명 달성 추진 ^{국토부}

- * 청년전용 대출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 0~1%)
- 월세대출 요건 완화(소득 2→5천만원 월세금 60→70만원 이하, 월 40→50만원)하여 추진('22.1~)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

구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기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1억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조건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1.5~2.1%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1.2%	보증금 3,500만원, 1.3% 월세 50만원, 0~1%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부담 완화*('21년 4.4만건 → '22년 4.6만건) ^{국토부}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0% 할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0% 할인

-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월세자금 보증 지원 ^{금융위}

- * △(전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
△(월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최대 1,200만원 지원

③ 주거 취약청년 지원

①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정착 지원 활성화를 위해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지자체 확대('21년 12개 → '22년 15개) ^{국토부}

*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 지원

②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불법 방조개기 등 집중단속 위해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 (36명) 및 법적 근거('22.상)와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22.하) ^{국토부}
- 대학생 등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 전 대학가 중심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기획조사 실시('22.7월) ^{국토부}
-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 안내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HUG 홈페이지) 구축('22.2월) ^{국토부}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참여자 및 주제 세분화하여 심층적인 의견수렴 및 신규과제 발굴(연 4회 정기회의 개최) ^{국토부}

②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중앙·지자체 정책 통합 안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안내 등 '마이홈' 포털 및 모바일앱 개선하여 정책 접근성 제고('22.2월) ^{국토부}

③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공유주택 펀드 조성('21.3월, 251억원)에 따라 도심 내 공유주택 운영 스타트업 등에 장기자금을 투자하여 민간 공유주택 활성화 지원 ^{국토부}
- 공유기숙사(공동기숙사) 법적 근거 마련('22.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④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

-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부산) 기본 계획('22.상) 및 실시계획 수립 지원('22.하) ^{국토부}

*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22.하)

- 지방 인구유입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 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10건 선정, '22.9월) ^{국토부}

* 지자체 사업계획에 생활SOC(국비 50억원 한도), 임대주택(LH) 지원

III. 교육 분야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및 미래 설계 강화

- ◇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 ◇ 미래 역량 강화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신산업·지역 인재양성 강화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장학금 확대, 평생교육 기회 확대

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온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교육부

〈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인상 (단위:만원) 〉

구분		기초·차상위	1~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1년	I 유형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022년	I 유형	700(둘째 전액)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700(둘째 전액)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대학입학금 완전폐지 위한 단계적 감축('21년 70%→'22년 80%) 추진 교육부
('23년부터 모든 대학교(학부과정) 입학금 완전 폐지)

장학금 지원 주요사업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 <small>교육부</small>	▶ 저소득, 중산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81만명 224조원 → (22) 82만명(추정), 283조원
	국가근로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근로희망 저소득, 중산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13만명*, 3,829억원 → (22) 12만명, 3,604억 *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1만명, 250억원 포함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4,284명, 333억원 → (22) 4,824명, 370억원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small>과학기술부</small>	▶ 이공계 분야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0.87만명, 522억원 → (22) 0.87만명, 529억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전문대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0.12만명, 87억원 → (22) 0.12만명, 87억원
취업 연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중소기업 취업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4.8천명 367억원 → (22) 4.8천명, 367억원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중소기업 선취업 후진학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0.9만명, 370억원 → (22) 1.0만명, 418억원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small>농식품부</small>	▶ 농업분야 취·창업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1) 0.16만명, 72억원 → (22) 0.16만명, 72억원

- 다중채무로 어려움 겪는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¹ 교육부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확대² 및 제도 개선^{3,4} 교육부

- 1)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학자금대출 원금감면(최대 30%), 연체 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최대 20년) 등
- 2) 저소득층 대학원생 지원 및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중 이자 전부 면제 성적 요건 등 폐지
- 3) 체납 발생 전, 대출자의 상환능력 및 의사를 확인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추진
- 4) '09년 대출자까지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2년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

②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고졸 후 재직중 후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금(후학습 장학금) 지원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유도 및 고졸인재 성장경로 다변화 교육부

* '20년 0.7만명 → '21년 0.9만명 → '22년 1.0만명(목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대폭 확대로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공 교육부

* 인원천명 : ('20년) 10 → ('21년) 20 ('22년) 30(목표) / 지원단기(만원) : ('20년) 35 → ('21, '22년) 최대 70

③ 지역 청년 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기업 연구소 등) 연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교육부

*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21년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4곳) → '22년 추가 2개 선정·지원

② 청년 미래역량 강화

- ① 기업수요와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유연화

- 2단계 LINC+ 종료에 따라 「3단계 LINC 사업」 개편·추진('22~) → 대학별 여건·특성 바탕으로 자율적 산학협력 모델 수립·추진(기본계획, '22.1월) 교육부

*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12~'16, LINC) →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17~'21, LINC+)

- 대학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신기술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 '21년 8대 분야(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컨소시엄 선정 → 단계적 확대 추진

- 신산업분야 기업, 교육기관(대학,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평가 개발·운영(Match業) 교육부

* (분야/과정 수) ('19년) 6개/24개 → ('20년) 8개/32개 → ('21년) 12개/48개 → ('22년) 13개/52개

② 범부처 협업으로 산업계 현장 수요와 공급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인재양성이 시급한 분야 현장 수요맞춤형 인재양성계획 마련('22.上) 교육부

신기술 교육 분야 주요사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신산업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small>교육부</small>	▶ 8개 신기술분야(AI, 빅데이터 등) 핵심인재 양성 - ('21) 8개 컨소시엄 882억원 → ('22) 8개 컨소시엄 890억원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small>산업부</small>	▶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 ('21) 41개 과제 1,142억원 → ('22) 49개 과제 1,304억원
	SW 마에스트로 과정 <small>과기부</small>	▶ SW 분야 최고전문가 집중멘토링 통한 SW 핵심인재 양성 - ('21) 150명 86억원 → ('22) 250명, 137억원
	메타버스 <small>과기부</small>	▶ 메타버스 청년개발자 양성 및 지재권 컨설팅 등 지원 - ('22 신규) 180명 47억원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 <small>과기부</small>	▶ ('21) 10개교(180억원) → ('22) 10개교(200억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small>교육부</small>	▶ 협약기업과의 채용약정 후 맞춤형 인력양성 - ('21) 1,330명 96억원 → ('22) 1,470명, 96억원
	군장병 SW역량강화 <small>과기부</small>	▶ 군장병 대상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AI·SW 교육 - ('22 신규) 2,000명 40억원
	선배들의 멘토링 지원 <small>과기부</small>	▶ 디지털 분야 선배들이 교육 및 취·창업 활동지원 - ('22 신규) 1,000명 3.5억원
그린 에너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양성 <small>중기부</small>	▶ 스마트팩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매년 500명) - ('21) 1,470명 5억원 → ('22) 1,970명(누적) 5억원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small>환경부</small>	▶ 환경 관련 14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지원 및 15개 과정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1) 2,037명, 374억원 → ('22) 3,502명, 401억원
	미래에너지 인력양성 <small>산업부</small>	▶ 그린뉴딜 등 핵심분야 인재육성 지원, 지역 기업 수요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21) 2,054명, 416억원 → ('22) 2,107명, 428억원
문화 콘텐츠 · 미디어 · 지식재산	ICT기반 수산인력 양성 <small>해수부</small>	▶ 4차 산업혁명기술과 수산·어촌 분야 기술 융·복합 수산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 ('21) 38명, 12억원 → ('22) 41명, 11.6억원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small>문화부</small>	▶ 문화기술 관련 석·박사 학위 운영, 예술+과학 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21) 120명 62억원 → ('22) 130명 82억원
	OTT 특성화 대학원 지원 <small>문화부</small>	▶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등 제작전과정을 아우르는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을 글로벌 OTT 선도 - ('22 신규) 10억원 (2개 대학, 각 5억원)
	대학연계 미디어 교육 <small>방통위</small>	▶ 대학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1) 38개교 0.3억원 → ('22) 40개교 0.3억원
지식재산 인재 양성 <small>특허청</small>	▶ IP중점대학,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운영 등 산업계 수요 대응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1) 3.2만명, 47억원 → ('22) 3.2만명(추정) 45억원	

③ 산업계 및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21년 711억원 → '22년 615억원)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 교육부

* 발명·특허('21년 14개 → '22년 14개), 환경('21년 5개 신규), 산림('21년 2개 → '22년 2개) 특성화고 지속 추진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① 고졸 청년 취업 지원

- 직무교육과 기업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회 초기정착을 위한 취업연계장려금 지원(1인당 5백만원) 교육부
- * 거점 공동훈련센터(7개소)에서 지역·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사전 직무교육 운영(1,050명) → 취업컨설팅·채용 후 기업현장교육 실시
- 직업계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통합 DB 구축 및 채용정보 연계 등 직업계고 취업 전용 시스템 “고졸만JOB” 운영(‘21.8~) 교육부
- 학생·교사뿐 아니라 우수하고 검증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유인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병행 교육부
- *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등록(누적) : (‘20) 2만개 → (‘21.11월) 2.3만개 → (‘25) 3만개(목표)
- ** 산업안전 강화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보급(‘22.4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지원관을 확대배치(교당 2명 이상) 등

②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 강화

-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프로그램(WE-Meet)*을 신규 추진하고 교육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연계로 진로·취업지원 기능 강화** 고용부
- *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탐색 → 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 취업 연계 지원’ 원스톱 모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일 경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협업)
- ** 기존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통합 추진(‘21년 182억 → ‘22년 325억)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의 후학습 지원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확대 운영(‘21년 49개교→‘22년 60개교) 고용부
-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21년 173교→‘22년 176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 대학 확대(‘21년 63교→‘22년 68개) 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국방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21년 23.5만명 → ‘22년 32만명) 국방부 등 다양한 자기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 *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 (‘21년, 병 정원의 70% → ‘22년, 병 정원의 100%)

③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교육기관·지자체 협업으로 지역 고졸인재를 육성,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1년 5개지구 22억원 →'22년 10개지구 93.5억원) 교육부
- *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원
-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기반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추진('22~24, 30개 컨소시엄) 교육부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 고도화 통한 서비스 질 제고 교육부

- 국내 석학을 포함한 국내·외 석학 강좌를 지속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다양한 강좌개발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K-MOOC 플랫폼 고도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을 위한 K-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 * K-MOOC 강좌별 수어통역 서비스 순차 지원('22.上)

② 온라인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추진 교육부

- * 사업계획 수립 및 착수('22.상, 통합포털시스템 개발·평생배움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등)→ 플랫폼 개발 방식 확정 및 구축(~'23) → 대국민 서비스 운영('24~)

③ 대학원격 교육 질 제고 교육부

- 10개 권역센터별 강점분야(교양·전공) 및 중점 육성 분야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격교육 질 제고

(4) 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자산형성 기반 조성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 ◇ 소득별 맞춤형 자산 형성 + 금융교육 강화
- ◇ 유형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1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지원

①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 근로 청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중·장기 자산 형성·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체계 구축

주요사업	소득구간	납입액(만기)	지원혜택
청년내일저축 계좌 <small>복지부</small>	▶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1) 1.8만명 → (‘22) +10.4만명	연 120만원 (3년만기)	▶ 본인 저축액(월10만원) 대비 정부 1~3배 매칭
청년 희망적금 <small>금융위·기재부</small>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22) ‘청년희망적금’ 상품 11개 은행에서 출시 예정(‘22.1분기)	연 600만원 (2년만기)	▶ 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small>금융위·기재부</small>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연 600만원 (3~5년)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 공제(최대 1,200만원)

- 청년병사의 사회복귀 시 목돈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3(33%)을 전역시 추가 지원 국방부

* 장병내일준비적금 자산형성 가능액 **754 만원** + 정부매칭지원금 **250 = 1,000만원 목돈 마련**
↳(원금) 720만원(40만×18회) + (이자) 34만원

②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청년·대학생의 생활자금 등 긴급 자금수요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저금리(3.6~4.5%)로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홍보 강화** 금융위
* 온라인 매체(유튜브, SNS 등), 이용수기 공모전 등을 통한 홍보 확대
- 다중채무(학자금+금융권 대출) 청년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위·교육부

*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

-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공통과목의 금융 관련 내용 내실화 및 금융 관련 선택과목(신설)의 교육콘텐츠 대폭 보강 교육부·금융위

* 추진 일정(교육부) : '22년 하반기 고시, '25년부터 순차 적용 예정

② 청년 건강 증진

①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일반 우울 청년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을 이원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담·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건강 지원 강화
- (일반우울)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마음건강바우처”* 제공 복지부

* 3개월(10회기) 주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

-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로 연계하여 청년층 조기 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복지부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확충(12개 시도 → 전국 17개 시도 확대)

연도 (시도수)	~19년(1개)	'20년 (누적 7개)	'21년 (누적 12개)	'22년 (누적 17개)
참여 시도	광주	+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	+ 인천, 강원, 충남, 전북, 경남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충북

- 심리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45대,+18대)

② 청년 건강 인프라 확대

- 청년세대 건강검진 확대 실시 지속 및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강화 방안 마련('22.下) 복지부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진출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월30만원) 지급기간 연장(3년 → 5년) 및 지급대상 확대('21년 약 8천명 → '22년 약 1만여 명) 복지부

- 주거·취업·교육·건강 등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8개→17개소) 확대 및 법적 기반 구축 복지부

②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발굴·지원 체계 마련 검토 복지부

* 노령, 장애, 정신·신체상 질병,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 학업·취업·직업 등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

-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을 지속하여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월 5~10만원 지급

-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가족센터 중심으로 사회 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 지속 여가부

③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장애대학(원)생 대상 원격수업 보조기기 신규 지원, 교육지원인력 지원단가 인상*(일반 10% ↑, 전문 3% ↑) 교육부

* (일반) ^{21년}10,000원 → ^{22년}11,000원 (전문) ^{21년}31,000 → ^{22년}32,000원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① 청년의 문화콘텐츠 분야 도전·혁신 지원

- 모험, 드라마콘텐츠 펀드 등 2개 분야 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중소 기업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 문체부

▶(모험투자펀드) 기획개발 등 제작초기단계 및 소외장르에 집중 투자 ('22년 총 2,001억원)
▶(드라마펀드)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IP확보 지원을 위해 투자 ('22년, 총 400억원)

-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문체부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	사업	주요내용
대중음악	ICT-음악 콘텐츠 상용화 지원	▶ 대중음악 기획·생산·유통·소비 단계에 정보통신 기술 접목한 콘텐츠 상용화 지원(22년 30억원)
	플랫폼 기반 대중음악 활성화 지원	▶ 잠재력 있는 청년 뮤지션 등 발굴하여, 음원 콘텐츠 제작, 공연 개최 지원(22년 25억원)
	온라인 대중음악 공연 제작지원	▶ 대중음악 공연 경쟁력 향상 위해 중소기업사 등의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 지원(22년 100억원)
웹툰 · 차세대 융복합	웹툰융합센터 조성	▶ 만화웹툰 창작 및 사업 교육 공간이 집적된 시설 조성하여 콘텐츠 개발 활성화(22년 30억원)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 다양성 만화 55개 과제 제작 지원, 만화 기획 개발 75개 과제 지원(22년 23억원)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22년 239억원)

②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 문화예술·여행·체육지원 등 저소득층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급 확대(저소득층 100%, 31만명)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기회(무대·장비 등), 예술가 지원금 및 공연진행비 지원(500팀, 72.5억원) 문체부

③ 청년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 예술인이 경제적인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 활동비 지원 문체부

* (일반예술인) 3백만원, 12,600명 (신진예술인) 2백만원, 2,100명 대상 지원

(5) 참여·권리 분야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인프라 내실화

- ◇ 정책결정에 청년참여 지속 확대하고, 정부-청년 소통채널 다양화
- ◇ 법령·연구·통계·전달체계 등 청년정책 인프라 내실화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참여위원회 확대 지속 및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국조실}
 - 청년참여위원회로 미지정된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추가 지정('22.2)
 -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활용가능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마련하고 인재정보 수집·발굴하여 등록('22.10)
- 청년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 분야 실효성 있는 청년참여
 - 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 청년 10%이상 참여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교육부}
 - *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의견 반영 의무화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22.上)
 -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등 청년 유형별 주거정책 회의체 운영하여 청년 주거정책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국토부}
- 정책수요 발굴·반영 위한 청년의제 공론장 및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부처가 협업하여 공론장 운영^{국조실}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제안 접수하고 제도개선 추진^{권익위}
 - * △(국민신문고) 2030세대 고충민원 빅데이터 분석 → 부처별 검토 및 개선 △(국민생각함) 청년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검토 → 소관기관에 권고 및 이행 점검

-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국조실}, 전문 분야별 소통채널 강화^{과기부·통일부}

주요부처 청년 직접참여 활성화 추진현황

- (문체부) '청년문화정책위원회' 신설, '청년문화포럼' 추진'
- (복지부) '좋은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운영
-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 청년분과 지원
- (교육부) '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 '청년 소통단' 정례화

2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 위해 연구기관 설립 추진^{국조실}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내 '청년정책연구단' 운영 통해 청년정책 중장기 방향성 도출(~'22.8)
- 청년기본법 개정 등 통해 분야별 지원시책 실행 근거 구체화하고, 관계법령 정비 지속 추진^{국조실·법제처}
- 정부-민간 two-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활성화^{국조실}
 - (정부) 중앙-지방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 운영(분기별)
 - (민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광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반기별)
-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고('22.下), 근거기반의 정책인프라 구축 위해 청년통계 관리체계 마련^{국조실}
 - 조사통계 보완하여 행정자료 활용한 '청년층 행정통계' 개발('22)^{통계청}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정책 온라인 전달체계 허브 역할 강화 고용부

-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확대 및 종합정보 연계 내실화

- ① 기능 확대 : 청년 이용자 개인별 정책 서비스 강화
 - ▶ 개인별로 수혜가능한 정책 정보알림 서비스 구축('22.2~'22.12)
 - ▶ 정책사업 신청 서비스 기능 신설
- ② 종합정보 연계 강화
 - ▶ 부처 및 광역·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22.3~22.6)
- ③ 청년 눈높이 홍보 확대 :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서포터즈' 운영(20명)

○ 청년정책 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

- 오프라인 전달체계 개선방안 수립하고, 지역청년센터 및 중앙지원센터 조성·추진 국조실

- 청년 지원시설에 최첨단 통신망 지원해 청년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과기부

○ 문화·관광·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연계·참여 사업 지속 추진

청년 공동체 연계·참여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① 청년마을 지원 <small>행안부</small>	▶ 지역살이·탐색, 취·창업 체험, 지역사회 교류 등 - 신규 청년마을 12개소 조성
② 청년두레 지원 <small>문체부</small>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 창업 지원 - 신규 청년두레 40개팀 지원
③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small>중기부</small>	▶ 지역 내 자연 문화자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속성장 지원
④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small>행안부</small>	▶ 전국 청년공동체 140개팀 지역사회 활동 지원
⑤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 <small>농진청</small>	▶ 청년농업인 창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 3개소 설치
⑥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small>문화재청</small>	▶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32개팀 지원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 대상 노동·금융·주거 분야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여 청년의 권익 보호와 생활 속 피해 예방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및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중재 지원 하고, 근로 권익보호 교육·홍보 고용부·여가부
 - 청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원*하여 금융관련 피해방지 및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친화적 금융정보**를 제공 금융위
 - * 금융교육협의회(年2회) → 금융교육기관(금감원 등 14개) → 온라인교육찾아가는교육 등(상시)
 - **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동영상 제작('22.1월, 12편)
 -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정책 및 임대차 계약 상식 교육 내용 담은 안내서 제공 국토부
 - * 고교 졸업예정인 예비청년 대상 안내서 배포('22.1월말) 및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순차적으로 대상 맞춤형 안내서 제작·배포
 - 청년 소비자리더 양성해 청년 주도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 지원 공정위
- 학생·여성 등 청년 대상별 인권 보호 제도 정착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 법제화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2.3)에 따라 현장 안착 위한 시범대학 운영지원(5개교 내외) 교육부
 - 국가연구개발 사업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검토 및 현황 관리 과기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통한 상담·삭제지원 및 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피해 지원 여가부
-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
 - 한상기업 인턴십 확대하고,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지원 외교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구축 환경부
 - 과학·농업 등 분야별 국제교류 활동 확대해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과기부·농식품부·여가부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철저

-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반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
 - 지연과제의 경우 제도개선 등 보완·개선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 최초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부처별 실행을 담보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반영 등 정책 대안 모색
 - 평가시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청년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심층평가하여 실질적 개선 유도
 - 평가지표 및 결과 등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재구조화 검토 추진

2. 기존 과제 보완 및 신규 과제 지속 발굴

-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 신규 과제 발굴시 '23년 시행계획 또는 하반기 종합대책, 계기별 청년대책 등에 포함하여 추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지속 점검·개선하여 이행력 강화

3. 청년과의 소통·홍보 강화

- 온·오프라인 참여 기반 확장하여 청년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
- 카드뉴스 배포, SNS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정책 주요 과제 적극 홍보

참고 1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 처
1분기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후 사업 개시	'22.1월	고용부
	▪ '22년 지역인재 9급 선발계획 공고	'22.1월	인사처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부산·춘천센터 설치계획 수립	'22.1월	병무청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 체결	'22.1월	고용부
	▪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수립	'22.1월	고용부
	▪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상품 관련 시행세칙 개정	'22.1월	국토부
	▪ '3단계 LINC사업 기본계획(안) 수립·공고	'22.1월	교육부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	'22.1월	중기부
	▪ SW중심대학 선정 공고	'22.1월	과기부
	▪ 22년도 인공지능 핵심인재사업 시행 계획 수립	'22.1월	과기부
	▪ '22년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시행계획 수립	'22.1월	과기부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침 마련	'22.1월	복지부
	▪ 취업후상환학자금(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	'22.1월	교육부
	▪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	'22.1월	교육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 실태점검	'21~2월	교육부
	▪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선정	'22.2월	고용부
	▪ 청년전용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22.2월	중기부
	▪ 공공기관 청년 일정험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2.2월	기재부
	▪ 한국형 니트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개시	'22.2월	고용부
	▪ '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 분석 결과 국회 보고	'22.2월	고용부
	▪ K-디지털트레이닝 '22년 제1차 통합공모 결과 발표	'22.2월	고용부
	▪ K-디지털크레딧 '22년 상반기 신규 훈련과정 선정결과 발표	'22.2월	고용부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정책 '22년 추진계획 수립	'22.2월	보훈처
	▪ '21년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 조사 공개	'22.2월	국토부
	▪ 주거포털 마이홈 개선 반영	'22.2월	국토부
	▪ '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22.2월	교육부
	▪ '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수립	'22.2월	교육부
	▪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22.2월	복지부
	▪ 창업중심대학 선정평가 및 선정대학 협약 체결	'22.3월	중기부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22년 지원기업 모집공고	'22.3월	산업부
	▪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2.3월	산업부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마련	'22.3월	보훈처
	▪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22.3월	국토부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개최(분기별)	'22.3월	국토부
	▪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2.3월	문체부
	▪ '22년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선발계획 수립	'22.3월	농진청
	▪ 지자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협의체 실시	'22.3월	복지부
	▪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22.3월	교육부
	▪ 청년 친화적 Tips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1분기	중기부
	▪ 청년희망적금 출시	1분기	금융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및 매칭	1분기	행안부	
▪ 취업서류 일괄제출 윈스톱서비스 구축 완료	1분기	행안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2분기	▪ '22년도 신규 청년마을 선정	'22.4월	행안부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지침 시도 안내 및 시행	'22.4월	복지부
	▪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여부 지자체 합동점검	'22.4월	국토부
	▪ 청년 월세지원 신청 개시	'22.상	국토부
	▪ K-디지털크레딧 하반기 신규 훈련과정 모집공고	'22.5월	고용부
	▪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1차 선발	'22.5월	국토부
	▪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의견 반영 의무화 시행	'22.6월	교육부
	▪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	'22.6월	국토부
	▪ 미래관광인재교육센터 구축	'22.6월	문체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련 인턴 선발 계획 공고	2분기	행안부
	▪ 행정공공기관 대상 데이터 분석 청년수련생 참여자 모집 선발	2분기	행안부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2분기	산업부
	▪ K-디지털트레이닝 '22년 제2차 통합공모 실시	2분기	고용부
상반기	▪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	'22.상	금융위
	▪ 인재양성 기본전략 마련	'22.상	교육부
	▪ 분야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수립	'22.상	교육부
3분기	▪ K-디지털크레딧 '22년 하반기 신규 훈련과정 선정결과 발표	'22.7월	고용부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부산·춘천센터 개원	'22.7월	병무청
	▪ 대학가·학원가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 점검	'22.7월	국토부
	▪ 제1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	'22.7월	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운영	'22.7월	복지부
	▪ FRONT1 펀드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 개시	'22.7월	금융위
	▪ 청년전용 모태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	'22.8월	중기부
	▪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	'22.8월	국조실
	▪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개최	'22.8월	환경부
	▪ 주거플랫폼 사업 대상지자체 선정	'22.9월	국토부
	▪ 에너지중견기업 특화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설	'22.9월	산업부
	▪ 경력단절예방의 날 통합홍보	'22.9월	여가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련 인턴 선발	3분기	행안부
▪ K-디지털트레이닝 '22년 제2차 해커톤 개최	3분기	고용부	
4분기	▪ 도시재생뉴딜 2차 인턴선발	'22.10월	국토부
	▪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인재정보 등록	'22.10월	국조실
	▪ 국민내일배움카드 '23년 운영 훈련과정 선정	'22.11월	고용부
	▪ 한국형 니트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22.12월	고용부
	▪ K-디지털플랫폼 '23년 신규 운영기관 공모	'22.12월	고용부
	▪ 온라인 청년센터 개인별 수혜가능 정책 알림서비스	'22.12월	고용부
	▪ 2022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 개최	'22.12월	중기부
▪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 시범사업 사업승인	'22.12월	국토부	
하반기	▪ 불법건축물 감독관 '23년 기준인건비 협의	'22.하	국토부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관리강화 마련	'22.하	복지부
	▪ 스마트 꿈드림센터 출범 및 시범운영	'22.하	여가부

참고 2

법률 및 하위법령 등 개정 필요사항 및 계획

분 야	과제명	제·개정 법령명	소관 부처	일정
일자리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22.2월
	디지털 자원 지원대상 확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방송통신발전 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급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기부	'22.1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제대군인지원법	보훈처	연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처	'22하
주거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22.3월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	국토부	'22.6월
교육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교육부	연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교육부	'22.상
복지 문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22.2월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22.2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22.2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22.6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22.6월
참여 권리	청년참여 20-30	청년기본법 제15조 등 개정	국조실	연내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사업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조실	'22.2월
	청년정책연구원 설립 추진	정부출연기관법 개정	국조실	'22.12월